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부가 책임져라

6월 26일 3개 산별연맹·노조(보건 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민주일반연맹) 소속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공동파업에 나섰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4월부터 공동투쟁을 벌여왔다. 5월 21일 1차 공동파업에 이어 6월에는 청와대 앞에서 함께 농성하며 문재인 정부에 정규직화를 요구해 왔다.

3개 노조가 연대투쟁에 나서자 문재인 정부도 완전히 외면하지는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에 '조속한 전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13개 국립대병원을 순회하며 노동조합과 사측을 한자리에 불러 면담을 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인 '직접고용'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것에서 결코 더 나아가지 않고 있다.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자회사 방안을 열어 놓고, "노사가 잘 해결하라"고 중재자 행세를 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인 교육부의 유은혜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에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 인기를 얻어 놓고, 장관이 된 뒤에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다.

유은혜 장관

정부가 국립대병원 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책임회피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늦은 국립대병원에 경영평가 점수를 깎았다며 재정 지원 삭감 압박을 가했다. 왜 그런 수단을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쓸 수 없다는 것인가.

또, 국립대병원 사측이 직접고용을



5월 21일 1차 공동파업 집회 경제 위기 탓에 정부는 재정 지출을 극도로 줄이려 한다. 연대투쟁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다

거부하는 핵심 근거가 예산 부족이므로 하다못해 재정 지원만 조금 늘려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5일 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 노사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재정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립대병원들은 이런 상황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이 제한돼 있으니 직접고용하면 정규직이 손해 본다면서 말이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다른 공공부문에 끼칠 영향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필수적인 재정 지출을 늘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문제인 것은 아니다. 2년 연속 정부 재정이 수조 원씩 흑자를 기록했다. 그 돈을 삼성바이오 등 제약·의료기기 회사들에 줄 생각만 했지(연구개발비 지원), 노동

자들에게 주지는 않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 '노동 존중'의 실체다.

국립대병원들 측은 이런 교육부의 의중을 꿰뚫어 보면서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있다.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형식적 답변만 내놓으면서 말이다.

신임 서울대병원장은 17일 노동조합과 만난 자리에서 잘 모른다고 발뺌했고, 7월어야 입장을 내놓겠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 다른 국립대병원장들도 눈치만 보고 있다. 일부 국립대병원의 경우 자회사 방안을 고수하거나 직무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등 처우 개선 의지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를 더욱 압박하고 항의를 강화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이 힘있게 벌어진다면 국립대병원 공동투쟁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19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 2019

8.22(목)~25(일) 서울
주최: 노동자연대

- ★ 19년 전통의 포럼
- ★ 70여 개 주제
- ★ 차별, 불평등, 착취에 반대하는 토론
- ★ 마르크스주의를 쉽게 배울 기회

marxism.or.kr

02-2271-2395, 010-4909-2026
marxism@marxism.or.kr | marxism.or.kr

▶ 1면에서 이어짐

3개 산별연맹의 연대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석 달 가까이 연대투쟁 속에서 자신감과 투지를 높여 왔다. 이들 중 일부는 새로 조직된 젊은 노동자들로, 차별에 대한 분노와 변화에 대한 기대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새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보면서 다른 노동자들도 자극을 받고 있다.

이런 장점이 투쟁에 제대로 쓰여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인 직접고용은 정부(와 국립대병원) 정책을

후퇴시켜야 하는 만만치 않은 요구인데다, 이 투쟁의 성패에 많은 것이 걸려 있다. 비정규직 없는 병원은 보건의료 서비스에도 중요한 문제이고, 병원 노동자 전체의 조건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정규직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파업에 나서고 있는 지금, 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연대를 해야 한다. 국립대병원 정규직 노조의 단체교섭에서 정규직화 요구를 제기해야 하

는 것은 물론, 공동 집회 등 연대투쟁을 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대병원이 그런 것처럼 공동 파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3개 산별연맹·노조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연대를 유지해야 한다. 이번 공동투쟁의 목표를 '직접고용'으로 한정하고 직접고용의 조건은 병원별로(사실상 노조별로) 대응한다면 연대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투쟁의 최종 결과를 병원별 불균등

성에 내맡기면, 일부 병원은 노동자들에게 나쁜 조건을 강요하려 할 것이다. 또, 일부 병원이 표준임금체계를 합의하면, 다른 병원들도 노동자들에게 표준임금체계를 통한 저임금 고착화를 강요하려 할 것이다.

전체 연대 전선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노동자들이 불가피하지 않은 후퇴를 강요받지 않고, 균등하고 고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이다. 그래야 다음번 연대의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다.

노동계약 강행 예고하는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민주노총이 실질적 총파업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3월 말~4월 초 노동계약 저지 항의 투쟁을 이유로 민주노총 간부들을 줄줄이 잡아 가두더니 급기야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구속했다. 국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수사조차 받지 않았는데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 탄압에 나선 것은 저항에 대한 보복일 뿐만 아니라, 노동계약을 조만간 강행하겠다는 신호이다. 국회가 열리면 탄력근로제 확대 계약, 최저임금 재계약 등이 추진될 수 있다. 여당 내에서도 최저임금 동결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노동계약을 추진하는 데서 한통속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탄압은 또,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 파업, 조선업 노동자 투쟁 등에 대한 협박이자,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수작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은 2년 내내 후퇴하더니 이제 역주행을 본격화했다. 문재인은 사용자 계급의 지지를 받으려고 별 망설임도 없이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았다.

계약안을 들이밀고거는 거절하니 구속 탄압으로 답하는 정부, 대통령 지시 하



민주노총이 여러 전선에서 싸우는 노동자 투쟁들을 연결시켜 포괄적인 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면 될 노동개혁들도 질질 끌다가 계약 법안과 맞바꾸라는 양치기 정부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정면 충돌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의 “노동탄압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적 투쟁” 선언은 실질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7월 파업을 실질화하는 게 중요하다. 사회적

대화에 미련을 버리고 대정부 투쟁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곳곳에서 벌어지는 투쟁들을 연결시켜 전면화하고, 포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시적 분노 표출에 그쳐서는 안 되고 효과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 좌파 활동가들은 이를 촉진하는 구실을 해야 한다.

노동자 연대

되도 않을 구조조정 내세워 노동조건 약화시키지 말라
구조조정 대상 기업 공개하라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wspaper.org